

누구나 중복투표 가능… 공정성 잃은 남구 주민총회

진월동, 5가지 안전 온라인 투표 주민의견 반영하는 지표로 사용돼 한명이 계속 투표 가능…의미 퇴색 남구 “인증 절차 도입 검토하겠다”

광주 남구 진월동이 2025년의 마을의 제를 선정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어뷰징(중복·편법 투표)으로 인한 투표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9일 남구에 따르면 남구 진월동은 지난 달 30일부터 광주 남구 주민자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 진월동 주민총회 온라인 사전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진월동 주민총회에 상정된 안전은 총 5가지인 △순환자원 회수로봇 ‘수퍼빈 네프론’ 설치 △진월동 시외버스정류장

화장실 설립 △진월동의 대표 건강·행복 일석이조, 푸른길 포토존 조성 △청소년의 취미와 건강을 책임지는 자전거 문화센터 마련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빛나는 크린하우스로 주민들은 한번에 2가지 안전을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광주시가 제작한 ‘마을e척척’ 플랫폼을 통해 앱과 홈페이지에서 10일까지 진행되며 주민총회 당일날 현장투표 결과를 합산해 우선순위가 결정돼 12일 진월동 한마음 축제에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투표를 통해 선정된 안전이 바로 행정 절차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진월동과 남구에 보고돼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때 참고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투표다.

하지만 온라인 사전투표 과정에서 인증 절차가 없어 주민투표가 주민의견을 반영

하지 못하고 부정투표가 진행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진월동 마을안전을 결정하는 투표지만,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누구나 투표할 수 있고 한 사람이 여러번 중복투표가 가능해 투표의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100명이 투표한다고 가정했을 때 70명이 A안전에 한표씩 투표해도 30명이 3번에 걸쳐 B안전에 투표한다면 B안전이 가장 높은 투표 수를 기록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광주 동구에 거주하는 본보 기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투표를 해보니 로그인이나 거주지역을 선택해야 하는 등과 같은 인증절차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었으며 여러번에 걸쳐서 투표를 해도 제재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었다.

이와 달리 광주 동구는 주민총회 안전

을 온라인을 통해 사전투표를 실시할 때 ‘우리동네do반장’이라는 자체 제작한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반드시 회원가입 후 로그인을 해야만 투표할 수 있으며 기입한 주소지와 다른 동 안전을 투표하려고 시도하면 ‘거주마음이 아닙니다’는 메시지와 함께 제재하고 있고, 중복투표도 불가능하다.

앞서 ‘마을e척척’도 지난해까지는 로그인을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회원가입과 로그인 등 절차가 어르신들에게는 문턱이 높아 주민 참여율이 너무 저조했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관련 절차들을 삭제했다는 것이 광주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진월동 주민들 사이에서 공정하지 못한 과정이 진행된다면 투표를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불멘 소리가

나온다.

진월동에 거주하는 김모(53)씨는 “저는 진월동 시외버스정류장에 화장실이 생겼으면 좋겠고, 진월동에 살지 않지만 푸른길 산책로를 자주 찾는 친구는 포토존이 조성됐으면 한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던 도중 중복투표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그럼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계속 투표해 시간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조작도 가능한 부분 아니냐. 이렇게 허술하게 투표를 진행하는 곳이 어딴냐”고 지적했다.

남구 관계자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하다보니 부정투표가 가능하다는 것을 늦게 인지했다”며 “다음 총회부터 부정투표 의혹이 없도록 관련 절차들을 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원기 기자 hyunki.min@jnilbo.com

광주고용청, 위험상황신고전화 ‘부재중비율 1위’

45.26% 부재… 업무 부담 지적도 김태선 “대응 체계 개선” 강조

고용노동부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위험에 노출될 경우 도움을 준다며 운영하고 있는 위험상황신고전화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에서는 절반에 가까운 45.26%가 전화 연결이 안 돼 전국에서 부재중비율 1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사진)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상황신고전화(1588-3088) 운영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총 8635건의 신고 중 30%에 달하는 2473건이 연결되지 않은 부재중 통화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광주가 부재중 통화비율이 45.26%로 가장 높았고, 이어 중부(31.06%), 부산(26.59%), 서울(26.38%) 순이었다.

전화가 연결됐으나 현장으로 출동한 실제 건수는 3년간 2326건으로 27%에 불



과했다.

낮은 응답률과 출동률은 고용노동부의 부실운영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위험상황신고 전화와 관련한 별도의 예산 및 전담 인력이 없어 근로감독 공무원들에게 부가 업무로 전화 응대를 떠맡기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야간 및 휴일에 신고 전화가 올 경우 공무원의 개인 휴대폰으로 연결해 받도록 하고 있어 과도한 업무 부담이 부재비율을 키워 노동자의 위험 노출 확률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도 잇따르고 있다.

김태선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홍보와 달리, 위험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먹통이 돼 오히려 사고와 산재 위험성을 키우고 있다”며 “위험에 처한 노동자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기 기자



폐지 오려 만든 한글 놀이

한글날을 맞아 지난 8일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열린 ‘한글사랑 교실’에서 어린이들이 폐지로 오려 만든 자음과 모음을 이용해 한글 놀이를 하고 있다. 어린이집은 한글날을 맞아 한글의 중요성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김양배 기자

한국전쟁 시기 광주·담양 민간인 12명 희생 ‘진실규명’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한국전쟁 시기 광주와 담양에서 발생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이 진실규명됐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

화위)는 지난 8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88차 위원회에서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와 ‘담양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2)’에 대해 진실규명으로 결정했다.

조사 결과, 광주와 담양지역 민간인 12

명이 부역 혐의 등의 이유로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해 주체는 경찰과 국군으로 파악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정상아 기자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국밥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국밥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